

제7회
백년포럼

다른백년, 역사의 새가 되어

사드배치와 한반도의 미래
- 남북의 평화공존은 불가능한가? -

발제: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 ▶ 일시: 2016년 8월 25일(목) 19:30~21:30
-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일원 공산권연구소, 대화운영부장 등을 거쳐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29~30대)을 지냈다. 통일부 직원 출신 첫 통일부 장관이었고, 두 정부(김대중~노무현)에 걸쳐 연이어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좌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현 평화협력원 이사장이다. 저서로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1984), 《정세현의 정세토크》(2010), 《정세현의 통일토크》(2013), 《정세현의 외교토크》(2016) 등이 있다.

【발제】

사드배치와 한반도의 미래*

- 남북의 평화공존은 불가능한가? -

정 세 현**

1. 북한이 원하는 것 : 미국과의 ‘평화협정’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재현되는 것일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 새 정부가 들어섰던 2013년 초,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고, 북한은 여기에 대응해 남한과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린 채 ‘1호 전투대세’를 발령했다. 높아진 한반도 긴장의 여파는 엉뚱하게 개성공단으로 튀었다. 4월 초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한 인력의 진입을 막으면서, 개성공단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석 달 간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유사한 행태를 꾸준히 경험했던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높아졌다. 도발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제대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대체 북한은 왜 저럴까?’에 대한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한껏 고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일까?

도발, 도발 그리고 다시 도발?

* 이 발제문은 2016년 6월 발간된 <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의 일부를 발췌, 전재한 것입니다. 전재를 허락해준 ‘서해문집’ 측에 감사드립니다.

** 평화협력원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한국의 언론은 북한의 움직임만을 보도합니다. 북한이 움직이는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보도가 잘 나오지 않으니, 국민들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난데없고, 그저 북한의 호전적인 본색을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핵실험을 하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나 독수리훈련(Foal Eagle)도 매년 하는 군사훈련인데 북한이 너무 요란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도, 인과 관계에 관심을 갖고 분석적으로 보는 축에 속합니다. 보통은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다보니, 국내정치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겁 없이 위협한 군사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는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군, 주한미군, 해외 주둔 미군은 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키리졸브와 통합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의 명칭은 한미 연합 특수전훈련에 참가했었던 미군 1특수부대단(1th SFG)과 한국군 1공수특전여단의 별명인 새끼 나귀(Foal)와 독수리(Eagle)를 따서 지은 것이죠. 특수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인 셈입니다.

키리졸브는 말 그대로 ‘중요한 결의’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대규모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전시증원훈련입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Team Spirit)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자, 1994년부터 이를 대신하기 위한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RSOI의 이름이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은 이렇게 매년 봄, 연례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독수리훈련은 예년에 비해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한미 합동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으로 국지도발을 할 경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계획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군대는 ‘북한의 심장부’를 타격한다는 것이었죠.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2013년 키리졸브가 끝나고 난 뒤에 독수리훈련이 유난히 강력하게 전개됩니다. B-52 폭격기가 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공개적으로 출격했습니다. 핵무기를 16발이나 장착할 수 있는 B-2 폭격기 2대도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왔죠. B-2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최첨단 F-22 전투기가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했습니다. 괌,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최첨단 공격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한 셈이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정된 국지도발 대응계획의 일환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하늘뿐만이 아니었죠. 핵잠수함과 구축함도 동해와 서해로 출격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결의안이 3월 7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은 북한 제재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리졸브가 있었고, 3월 1일 시작된 독수리훈련은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4월 말까지 북한은 정치·경제·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난리를 친 이유입니다.

미국은 ‘협상’, 이명박 정부는 ‘반대’

질문: 하지만 북한이 먼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답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는 인과 관계의 고리 가운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라내서 분석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이번 상황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다시 핵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이번에는 오바마 정부와 핵 문제를 그야말로 끝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월 12일 핵실험을 했겠죠. 즉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핵과 맞바꾸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강수를 두면 반드시 미국은 회담에 나왔다’는 ‘성공의 추억’이 있습니다. 1993년 3월 NPT를 탈퇴했을 때, 또 2006년 10월 첫 번째 핵실험을 했을 때, 그동안 압박과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강수에 미국은 처음에는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비공개든 공개든 회담으로 갑니다. 북한은 새로 출범한 2기 오바마 정부와 ‘이번에는 결판을 내자’는 생각으로 연이어 초강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1기 오바마 정부 때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법이 시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죠. 그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2009년 2월 13일,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연설에서 중대한 발언을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첫째,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북미수교를 하겠다는 것. 둘째, 공동성명 4항에 있던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 셋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9·19공동성명의 원래 내용은 북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북미 수교와 경제 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는 2005년 9월 19일에 6개국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9·19공동성명’이라고 부르는데, 1) 북한의 비핵화, 2) 미국과 북한의 수교, 일본과 북한의 수교, 3)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대북 경제 지원, 4)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논의, 5)이 합의사항들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다만 평화협정 문제는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별도 포럼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 뒤로 미뤄놓았던 것입니다. 2009년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의 발언은 북핵 문제가 부시 정부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바마 정부로 넘어왔으니,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 문제를 앞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이런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비핵·개방·3000’이었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이 붙은 겁니다. 그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先) 비핵화’ 장벽에 막혀 오바마 정부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으며, 결국 6자회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그 방식대로, 북한핵 포기과 미국의 북한 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을 만들어놓고 대북제재를 진행시키면서도,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해 7월 23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ARF(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회의에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명박 정부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다시 힐러리가 파키스탄에 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즈워스 대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직접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외교적인 관례상 이 정도 이야기는 수행원 중 차관보가 발표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6자회담 재개를 중시했다는 이야기죠. 보즈워스를 평양에 보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수교해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경제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힐러리 해법’을 북한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온 뒤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또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도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은 미국이지만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도 나서야 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6자회담에 한국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담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6자회담 재개정책은 없었던 것이 되었고, 오바마 정부도 더 이상 ‘힐러리 해법’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일괄 타결)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행동 대행동, 말 대 말과 같

은 방식의 단계적·점진적인 회담이 결국 북한의 살라미 전술(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목표들부터 조금씩 얻어가는 단계적인 전술)에 말려들 여지만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처럼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방에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에 대해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결국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명박 해법’도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하는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오바마 정부 1기 때의 ‘힐러리 해법’을 빨리 가동시키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점에 독수리훈련, 키리졸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같은 것들이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보니 구분 이 잘 안 되지요. 북한의 진짜 메시지는 ‘힐러리 해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과의 ‘평화협정’

북한 핵 문제에서 핵심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책임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북한이 핵카드로 받아내려는 것은 북한의 안전보장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죠. 1993년 NPT 탈퇴 이후 북한이 20년 동안 즐기치게 요구해온 것이 북미 수교, 북미 평화협정, 경제 지원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1차 핵 위기’가 터진 뒤,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쳐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전쟁의 당사국이며, 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수교라는 정치적 행위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법적 행위는 포리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기본합의’에서 관계 정상화의 전 단계로서 연락사무소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통상 관계도 만들자고 했죠. 경제 지원

의 일환으로 200만kw 경수로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미국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로 북한의 요구는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199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으로 의회 권력이 넘어갔죠. ‘제네바기본합의’ 이행이 무산되면서, 초동단계에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북핵 문제는 ‘합의 - 파기 - 제재 - 협상 - 합의 - 파기...’의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에 들어 있는 파기는 북한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내부의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안 지킨 것이고, 미국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안 지킨 경우가 많습니다.

오바마 정부 1기에서 ‘힐러리 해법’은 2009년 연말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보즈 위스가 2009년 11월 말에 평양을 방문해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경제 지원 논의를 위해 6자회담을 시작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동의했죠. 그리고 이를 이명박 정부에 이야기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에도 오바마 정부는 연말까지 힐러리 해법을 가동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처럼 선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세계 밀어붙이면 미국이 움직이고, 바로 6자회담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에 의해 가동이 중지됐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6자회담 합의사항이 실질적으로 모두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가동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6자회담 합의가 완전 무효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2013년 미국의 국무장관은 존 케리로 바뀌었지만, 북한은 1기 오바마 정부 때 시도했던 힐러리 해법이 2기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1기 때는 북한의 선 비핵화를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결실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 선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잘 공조하면 제대로 된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힘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경우였죠.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 없이 북미 접촉은 불가하다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했습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어떤 고도의 전략을 쓴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압박을 주장하는데,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또는 동북아 전체 판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과 협상에 나서면 ‘통미봉남’이 오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생각은 ‘한국의 힘이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쓰일 때도 통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병행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만 비핵화도 해야 한다고 해서 선(先) 대화 후(後) 비핵화인 줄 알았는데, 연계라고 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선 비핵화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대화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으로 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 독트린’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신뢰프로세스에 선 비핵화를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신뢰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을 함께 가지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아마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세계 나가는 것 같지만 서둘러 6자회담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일 텐데요, 왜 북한은 회담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북한 경제가 2011년, 2012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먹고 입고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경제의 내부 자원이 모두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용어로 ‘내부 예비’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예비’, 밖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물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풀려야 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대북 지원이나 경험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쨌건 큰 규모의 지원은 미국에서 들어야 합니다. 1999년 미국은 지하 핵시설로 의심받던 금창리 지하 동굴의 현장 답사를 위해 식량 60만 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핵시설이 아닌 지하 동굴로

밝혀졌죠. 하지만 미국은 지하 동굴을 확인하는 관람료로 60만 톤을 지원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식량 지원 100만 톤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으로 북한 경제가 호전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요즘은 시장경제원리가 국가경제 운영의 중심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으니, 대체재 차원에서 중국 것이 북한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북한이 중국 때문에 먹고 산다든지, 형편이 완전히 풀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경우,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를 볼 때 북한 책임이 제일 크고 미국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북핵 문제의 해결 기회를 흘려보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미통북’, ‘통미통남’을 하던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한국이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하기도 했죠. 한국은 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으로 평가된 9·19공동성명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화된 남북 관계를 디딤돌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북미 관계와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남북 관계도 나빠지는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윈윈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 국면으로 들어갔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3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 나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2003년 8월 7차 남북 장관회담부터 14차까지 여덟 번 남북 장관급회담을 할 때마다 회담 합의문 제1항에 매년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전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내용들을 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장관급회담 시간의 3/4 정도를 거기

에 썼죠. 북핵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대북 지원도 할 수 있고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판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절대 한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다자회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n분의 1로 나누자는 생각을 할 것이고, 한국을 끌고 들어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에 200만kw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70%를 한국이 담당했습니다. 20%는 일본, 10%는 EU에 넘기고, 미국은 1년에 5천만 달러 정도의 중유만 8년 정도 지원했습니다. 6자회담 시작할 때도, 미국은 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나눌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자회담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1 : 1 협상에서는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쩔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나라가 관여해 설사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다른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다자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처음부터 판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아예 협상 판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을 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너무 잘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왜소해진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의 역할이 더 돋보이고 필요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커지게 됩니다. 2003년 8월부터 미국은 6자회담을 열어놓고 회담 전에,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별도 회담이 있을 때, 반드시 한국의 통일부 장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경우는 통일부에 와서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 때 북한에 이런저런 얘기를 미리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차기 6자회담에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부탁한 것이죠. 그때도 금석지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세월

에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교부와 상의해도 되는 미국 관료들이 통일부에 왜 오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위상이 몇몇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에 부탁해도 안 되니 중국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죠. 과거에는 한국에 그런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북미 수교가 되고 미군이 나가면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일종의 공포감입니다. 그런데 한반도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보장하는 국제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겠죠. 거기까지가 한반도 평화 체제입니다.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그때는 국제적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걱정은 오히려 미국이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1992년 초에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주었습니다. 1992년 1월 김용순 조선로동당 비서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용순은 아놀드 켄터 당시 미 국무차관에게 “북미 관계 정상화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걸 용인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지금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 일종의 균형자, 평화 조성자 역할이다.”라는 조건을 붙였죠. 이는 통일 후에 독일에 남아 있는 5만 명의 미군과 같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독일에 있는 미군은 유럽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클린턴 정부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만 되면 미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미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니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한국을 공산화시킬지 모른다면 한국전쟁을 애써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평화협정 협의를 시작하고, 북미 수교하고, 북일 수교도 해서 한반도가 좀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2. 중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의 꿈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한, 미, 일은 한목소리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여기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중국 스스로의 입장도 중국 역할론에 힘을 실어주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핵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더없이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과 미국 관계만큼,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돈독하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군사적 방식보다 ‘화친’ (和親)의 방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스려왔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지지와 동맹 유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동북3성 진흥계획과 북중 동맹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집권 후반기부터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 성의 동북 3성 진흥계획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취임 이후,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5년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투자를 유

치하려고 했지요. 동북 3성의 경제 진흥에 북한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경제에도 선순환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사안이기도 합니다.

동북3성 진흥계획에서는 길림성에서 나진·선봉으로 가는 출해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나진·선봉 쪽으로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 부흥에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또한 중국은 서쪽으로 신압록강 대교를 건설 중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앞으로 남한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북 3성에서 생산한 물자를 중국 내륙으로 수송하는 데도 북한을 통하면 편합니다. 또한 수출품을 나진·선봉을 통해 상하이나 홍콩으로 옮길 때 물류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나진·선봉·신의주는 중국 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골치 아픈 일을 벌이니, 중국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편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관리하라는 요구가 계속되는데 무반응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수를 두다가 북한이 튕겨 나가더라도 하면 동북 3성 진흥계획이 무너질 판입니다. 중국더러 북한을 내치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요구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데에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며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 중 가장 강력한 것이 1961년 북한과 맺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맺어지기 닷새 전인 7월 6일 김일성 수상이 소련에 가서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북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29일 평양을 떠난 뒤 7월 6일에야 동맹 조약을 체결했으니, 사실은 소련이 북한의 요구를 잘 안 들어주었다는 얘기겠지요. 김일성 수상은 소련과 어렵사리 조약을 체결한 뒤 바로 중국으로 가서 11일에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합니다. 두 조약 1조에는 동일하게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소련과 맺은 조약의 효력 기간은 10년이고 이후 5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쪽이 문제를 제기하면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5년씩 연장해오던 것을, 1992년 러시아 쪽에서 부담을 느껴 북한에 폐기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00년 9월 ‘북러 신(新)우호선린협력 조약’을 새로 체결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일반적 우호 관계가 되었습니다. 동맹으로서 북한과 소련, 아니 러시아는 이미 1992년에 끝난 것이죠. 반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약은 20년 기간으로 하되, 2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기하려면 쌍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덕분에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게 북한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한나라, 당나라 이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 유목 민족들을 화친(和親)으로 다스려왔다는 것입니다. 유목 민족들이 중국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조치가 아닌, 식량을 공급해주거나 공주를 시집보내 아예 사위의 국가로 만들어 관리하는 화친의 방식으로 외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중국 외교에는 기미부절(羈靡不絕)이라는 방침도 있습니다. 기미는 소나 말의 고삐와 재갈이라는 뜻입니다. 고삐를 느슨하게 놔두고 일정한 테두리에서 움직이게 하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면 경고를 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 외교의 기본이고 전통입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저우언라이의 평화공존 5원칙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정불간섭 · 상호존중 · 상호불가침 · 평화공존 · 호혜평등입니다. 중국의 수염을 뽑으려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독거리 데리고 가는 것이 중국 주변 외교의 기본입니다.

중화부흥(中華復興), 중국의 꿈(中國夢)

오늘날 중국 외교 방침은 4자성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덩샤오핑 시절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로 시작해 후진타오 시대인 2003년부터는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우뚝 선다), 2004년 유소작위(有所作為,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 뜻을 관철시킨다)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힘이 있으니까 꿏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는 국가가 아니며, 필요한 행동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커진 국력에서 강한 자신감이 배어난 것입니다. 2005년이 되면 화해세계(和諧世界, 세계와 조화롭게 어울린

다)를 이야기합니다. 조화롭게 만든다는 뜻이지만, 그 말 속에 ‘팍스 시니카’(Pax Sinica)도 들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조화롭게 만든다는 얘기는 골치 아픈 녀석들도 품어 자기편으로 만들고, 중국의 말을 듣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화부흥(中華復興), 중국의 꿈(中國夢)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해세계와 연결되면서도 “중국은 하늘 아래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다. 이게 중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관계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북한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중화부흥으로 가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더러 북한을 버려라? 중국이 러시아에서 낚은 무기를 사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그 두 나라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과도 협력을 이야기하는 한편 러시아에도 손을 뻗치려 합니다.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호이-35 전투기 같은 러시아의 낚은 무기를 구매해줍니다. 러시아가 중국 편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겠죠. 중국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20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나, 잠비아에 50억 달러를 원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걸 보면 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가 마오쩌둥 시절의 ‘3개 세계론’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오쩌둥 시절 중국은 미국 중심 서구 세계를 1세계, 소련 중심 동구 세계를 2세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축에 끼지 못하거나, 두 세계와 상대하지 않는 나라들인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나라들을 3세계로 분류해 이들에게 중국과 손잡고 미국, 소련에 대항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패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3개 세계론’이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천하삼분론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 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 서도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은 쓰지 않을 겁니다.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를 확실히 할 수 있게 설득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에도 바람직합니다. ‘비핵산’(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5대 핵보유국, 미·러·중·영·불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되 대외로 확산되는 것만 막으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비확산보다는 비핵화를 바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확실한 입장을 정립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미국에게만 부탁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북핵 문제 때문이라도 독자적인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3. 미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을 포위하라

2014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방한이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줄 ‘선물’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 선물이란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비롯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이 선물을 안겨주는 것은 곧 한, 미, 일 3국의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의미한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한 이후, 한, 미, 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MD나 사드 배치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군사적 조치다. 북핵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포위하는 대열에 빨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해결하고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인가? 대전략 없이 흔들리는 외교정책 속에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일정은 원래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1박 2일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한 결과로 알려졌지만, 과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유

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방한의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주어야 할 선물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계획에 없었죠. 김영삼 정부는 이때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4자회담이라는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남·북·미·중이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을 미국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도중 몇 시간 동안 제주도에 들러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노란 유채꽃밭 앞에서 4자회담을 제안하는 장면을 연출한 후, 클린턴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총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과 중국만 방문한다면, 한미 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집권 여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정부와 여당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들여다보면 4자회담이 왜 미국에 ‘방한 답례 선물’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는 미국의 정책에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은 종종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도 이때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로 북핵 문제는 일단 봉합이 됐고, 미사일 문제 등이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이를 위한 북미 양 자회담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상황, 남한 입장은 반영되지 않으며 결과만 통보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대북협상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이 4자회담을 제안하니, 미국은 뿌리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클린턴으로서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2014년 한미 정상회담은 이 정도 수준의 대가로 성사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더 큰 대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최근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기 구매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안 그래도 한국 정부가 오바마 방한의 대가로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비롯해서 미국의 무기체계를 구입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무기 판매에 열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미국은 자동예산삭감제도(시퀘스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1년 8월, 향후 10년간 매년 1,100억 달러씩 총 1조 2,000억 달러의 미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하기로 하는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했죠. 시퀘스터는 2013년 1월 1일 발동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2013년 1월 초 재정절벽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3월 1일로 기한을 두 달 연기시키기로 합니다. 어쨌건 1,100억 달러의 삭감 예산 가운데 국방비 삭감액은 매년 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요구되는 무기 현대화를 무슨 재원으로 마련하겠습니까. 결국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산 신형 무기를 구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해제를 적극 지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헤이글 장관은 중국에 가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가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도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갈 길 바쁜 오바마는 중국 견제에 중요한 계기가 될 2014년 아시아 순방에 굳이 한국까지 들러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바마가 서울에 왔다면 미국의 첨단무기를 사거나 MD와 관련해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미국에 약속하는 정

도의 선물은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는 미국을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북핵보다는 중국 포위망 강화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아닙니까? 북한은 미국이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거나 MD를 구축해서 안보·군사 협력을 강화해간다면, 북한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더 커지게 되겠죠.

미국은 말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선(先)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중국 역할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북핵 해결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북한의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을 것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22년 만에 가장 강도가 높은 한미 상륙훈련인 쌍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을 통해 핵을 내려놓는 대가로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을 받아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북핵 문제보다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과의 동맹 강화입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에서 중·일 간 영토분쟁이 생기면, 확실하게 일본 편에 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또 필리핀, 베트남 등이 연관된 난사군도 문제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2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열렸습니다. 물론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사안을 왜 군이 언론에 공개했을까요? 군 당국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의도는 무엇일

까요?

답변: 대규모 훈련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마치 북한에게 “반발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었죠. 이것은 다시 ‘저런 험박 공갈이나 하는 자들과 무슨 회담을 하느냐’는 여론이 일어나길 바라는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안 풀리도록 상황을 만드는 고도의 양면전술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 내에서도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데에는 국내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이 박격포 진지를 구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냈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결국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인기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2일 무인정찰기가 강화도에 추락했고,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어딘지를 두고 남과 북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인정찰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청와대 부근이 찍힌 걸로 봐서 북한 소행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며칠 동안 설전이 오갔죠.

국방부는 초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국방부의 정보수집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쪽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 의해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인기가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다며 질책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자신들도 열심히 했다고 항변하면서, 우리의 무인기 전력을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 전력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보다, 아군의 전력이나 국력에 대한 정보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판이 뜨겁다고 뛰다가 불 속에 빠져버린 결과가 된 셈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에서 출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는 것이 국방부 발표입니다. 그럼에도 무인기 이슈가 실제적 진실과는 별개로 대단한 일인 것처럼 포장되었고, 이스라엘의 저공 레이더를 사들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논객들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정치적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예산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예산심의가 오는 7월부터 하원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3월부터 미군 태평양사령관이 북한과 관련해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서태평양 지역, 특히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해가고 있는데, 무인기 이슈도 이와 연결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방부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은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못 찾았으며, 한·미가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 무인기가 정말 북한의 것이라면, 북한은 아주 싼 값으로 남한의 국방비를 탕진시키는 효과를 본 셈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 정도까지 계산하면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내심은 북핵 문제의 해결인가

질문: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공개되는 정책과 실제 추진되는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국은 ‘그동안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북한이 회담 이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어겨서 비핵화가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됐다’, ‘북한이 핵 문제를 풀려는 의도가 없었고 회담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며 자신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북쪽에 넘겼습니다.

양국은 북핵 문제 미해결의 책임을 전부 북한에 넘기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북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핵카드로 얻어내려는 반대급부가 있는데, 미국이 이를 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만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한테 여러 번 당했다면서, 이번에는 북한의 선 행동을 확인하고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북한처럼 작은 나라한테 당할 만큼 어리석었다는 말인가요?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국제정치를 좌우해온 나라입니다. 군사력은 물론 막강한 정보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한테 속았다, 당했다고 말하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미국의 대국답지 않은 처신과 책임 전가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약속 이행을 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남한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질질 끌거나, 합의 문구를 북한에 유리하게 재해석하면서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책임 공방을 하는 동안 다른 꿩꿩이를 시도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교나 국제정치에서 절대선, 절대양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북한도 미국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2005년 9·19공동성명 합의 당시 미국은 합의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도 미국의 본심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미국은 동북아에 무기를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MD를 이 지역에 팔아야만 중국의 군사력을 제압하는 동시에 미국 군산복합체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D를 팔려면 북핵 문제가 꼬여 있어야 합니다. 북핵을 구실로 MD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에 설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두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한·일 정부가 MD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제네바합의는 그해 말에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1994년 제네바합의로 2002년 말까지 8년 동안 동결됐던 북한의 핵 활동이 풀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북한을 무작정 압박해 제네바합의에 파탄을 몰고 왔을까요?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중국의 경제력이 1990년대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국제정치적 발언이 행사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등장한 시점(2003년)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은 좋은 빌미가 된 것입니다.

북핵이나 중국 견제나

놀랍게 빠른 속도로 국력을 키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구축하겠다고 태평양을 나눠 쓰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2002년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던 것은, 부시 정부의 호전적 성향 때문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보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큰 틀에서 나왔던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즉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레버리지로서 ‘북한 때리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위상과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카드로 북핵을 잡은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국제정치를 좌우했던 미국답게 멀리까지 본 것이겠죠. 오바마든 부시든, 보수든 진보든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그리고 국가이익 앞에서 미국은 하나입니다. 말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치지만, 행동은 중국이라는 무섭게 부상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 북핵을 고질적 문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

로 이런 판세를 잘 읽고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활용해, 미국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을 먼저 열어나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북핵 정책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관성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 채 진행된다면, 임기 내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확정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입니다. 물론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누려온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사라질 그들의 기득권이 통일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사 기본에 충실해야 하듯이, 통일도 기본부터 잘 다져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남북 관계부터 잘 풀어 나가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도 잘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 문제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민족 문제성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과정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평화와 통일의 여건이 갖춰진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문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남북 관계보다 대외 관계를 중시하고, 대체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통일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상반된 통일정책관과 대외정책관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8·15에 분단 70년을 넘겼지만, 같은 시기에 분단된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2015년 10월 3일이 독일통일 25주년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문제도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였습니다. 1990년 독일통일은 1969년 집권한 서독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기 시작한 동방정책(Ostpolitik)의 결과였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시작한 동방정책은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동독의 배후 국가인 소련과의 관계도 개선해나가는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당연히 동독과의 관계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집권 13년 동안, 동방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보수 정당인 기독교민주당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민주당 정부의 헬무트 콜 총리는 사회민주당의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민주당 정부도 통일 문제의 국제 문제성보다 민족 문제성을 중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독에서는 이념과 정강정책을 달리하는 정권들도 일단 통일 구심력부터 키우면서 통일 원심력을 관리해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방정책이 독일통일로 꽃피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돌아보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그 방향과 중점이 엇치락뒤치락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20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지켰던 서독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냉전시대 보수 정권, 즉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대에는 통일이라는 말은 많이 쓰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는 별로 힘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북 체제 경쟁이나 대북견제와 압박,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통일 문제의 국제 문제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지만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북 총리급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배후 국가인 소련·중국과 수교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보수 정권이었지만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는 없다’면서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진 뒤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했지만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됐습니다. 대북 쌀 지원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미국 등의 동의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수 정권도 ‘선 남북 관계, 후 통일외교’의 순서를 지켰던 것입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에 끌려가거나, 먼저 “어찌 하오리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에야 비로소 집권할 수 있었던 진보 정권은 10년 동안 남북 관계 개선과 유관국 협조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를 주변국 협조보다 반발짝 정도 우선시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도 크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말 대신 ‘내독 관계’라는 말을 주로 쓰면서 요란하지 않게 독일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간 서독의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했지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우선순위에 놓고, 통일외교는 관련국들이 남북 관계를 지원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권인 부시 정부가 남북 관계를 견제하려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미국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오콘들이 북한의 무가내로 북한을 압박하려 할 때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을 통일·외교·안보 정책기조로 정해놓고 미국을 설득하며 우리 길을 갔습니다. 결국 미국 네오콘들도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견제하지 못하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으로 평가되는 9·19공동성명은 노무현 정부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남북 관계를 통일외교보다 우선순위에 둔 결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입니다. 하지만 같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면에서는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와 비슷하지만, 한미 동맹을 유난히 중시하는 경향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보다는 통일외교를 중시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보다는 북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나아가 ‘통일이 임박했다’느니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르니 통일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느니, 통일이라는 말을 참 쉽게, 그리고 많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조속한 평화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간에는 변변한 당국회담도 못 해봤고, 남북 관계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미국과 통일 문제를 협의해나간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통일 과정에 북한이 왜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말들인가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 문제가 국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보다 주변국들과 통일 문제를 먼저 협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통일 문제에 접근하면 소리는 요란하게 날지 모르

지만, 통일의 기본 요건인 통일 구심력은 커지지 않습니다. 주변국들과 통일 문제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통일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통일을 하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면서 통일 구심력부터 키워가야 합니다. 통일 원심력을 약화시키거나 밀어내는 외교는 차후의 과제인 셈입니다.